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42대 총재에 동해 출신 김대영...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개원 후 개근의원 절반 그쳐... 출석률 90% 이하 7...	2
춘천MBC		11대 강원도의회 1년, 평가는?[1/3]	3
江原日報	11면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준공	5
江原日報	온라인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폭염대책, 사회적 재난으...	6
연합뉴스		강원 10년간 온열질환 781명.10명 사망..."중장기 대응책 ...	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폭염 대비 안전대책 만전"	8
강원도민일보	19면	[목요단상]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주문진 영화 찾아야	9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10
KBS 춘천		건물은 하난데 쉼터는 2개?...개수 늘리기 급급[1/2]	11
江原日報	07면	道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000명 지원	13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TP, 반도체 산업육성 고도화 착수	13
강원도민일보	01면	다문화 학생 수 10년간 2배...강원교육 '공존' 화두	14
강원도민일보	09면	'WT본부 이전 협약' 태권도축제 전 가능할까	15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테크노밸리, 업체-정부 가교 역할 톡톡	15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모든 시·군 '폭염특보' 비상 2단계 근무 확대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피서철 안전관리 끝까지 긴장해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펄펄 끓는 폭염,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보호를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북한강 특구, 강촌 제외 땀 실익 없다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도내 7곳은 안전한가	20

2023 08 02 ()

강원도민일보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42대 총재에 동해 출신 김대영씨 취임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는 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대 김대영 총재가 취임하고, 제41대 김해종 총재가 이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42대 총재에 동해 출신 김대영(58)씨가 취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는 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대 김대영 총재가 취임하고, 제41대 김해종 총재가 이임하는 '총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심규언 동해시장, 허명연 354복합지구총재협의회장, 홍희표 전 국회의원, 김윤재 동해시체육회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재석·김기하·심영곤·김기철·이한영·문관현·조성운 도의원, 이동호 동해시의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양희전 삼척시의회 부의장, 동해·삼척·태백·정선지역 시·군의원, 도내 라이온스 클럽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는 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대 김대영 총재가 취임하고, 제41대 김해종 총재가 이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대영 총재 1만달러, 김영만 1부총재 등 속초클럽회원들 1만6000달러, 최재홍 37대 총재 3000달러, 13개 지역위원장들 1만3000달러, 김정자 12지역 의전분과위원장 1000달러, 신옥자 국화라이온스클럽 회장 1000달러 등 LCIF 재해구호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한상기 354복합지구 전 의장, 김윤재(24대)·김진영(31대)·최재홍(36대)·주선희(38대)·김상호(39대) 전 총재가 각각 100만원씩의 지구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김대영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역대 훌륭한 총재들의 좋은 사업을 이어가며 힘든 일에는 항상 앞장서겠다"며 "위대한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는 104개 클럽, 3300명 회원들과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강원지구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총재는 세경대를 졸업한 후 동해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창호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동해 묵호JC회장을 역임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03

도의회 개원 후 개근의원 절반 그쳐… 출석률 90% 이하 7명

<49명 중 24명>

본지 11대 도의회 의원 출석률 분석

1년간 청가·결석계 75건 달해

심오섭 회의 최다 참석 '개근왕'

시·군의회 중 춘천만 현황 공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개근 의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횟수가 가장 많은 '개근왕'은 심오섭(강릉) 도의원이다.

본지가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난 해 7월 312회 임시회부터 지난 7월 321회 임시회까지 총 10회 회기의 의원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100%인 '개근 의원' 비율은 48.9%로 집계됐다. 49명 중 24명만이 본회의 등 의회에 서 열리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도의회에 제출된 청가 및 결석계는 총 75건이다. 이 가운데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기찬(양구) 전 의원은 참석 대상 회의 총 42회 중 11번의 청가를 내 출석률이 73.8%다. 이어 최재민(원주)·심영근(삼척)·최규만(횡성)·권혁열(강릉)·원미희(비례)·하석균(원주) 의원 등이 80%대 출석률을 보였다.

권혁열 의장은 참석 대상 본회의 16

회 중 공식 출장이 두 번 있어 이같이 집계됐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불참 사전 승인은 '청가', 사후 승인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근 의원 가운데 회의 참석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총 64회로 집계된 심오섭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의 평균 회의 수는 44.9회로, 심 의원은 이보다 약 20회 많이 회의에 참석했다.

심 의원은 지난 1년 간 소속 상임위 사회문화위원회를 비롯해 1기 예산결산특위, 재정효율화특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강원도립대총장 인사청문 특위 등 5개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00%출석률을 보인 24명 의원 가운데 회의 참석 횟수가 50회 이상인 의원은 심오섭 의원을 포함해 7명이다. 김길수(영월)·김용래(강릉)·박관희(춘천)·윤길로(영월)·전찬성(원주)·최재석(동해) 의원 등이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책 견제, 감시, 예산 심의 등 모든 활동이 의회 내에서 이뤄진다"며 "세금을 받고 활동하는 만큼 회의 참석은 의정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 출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출석현황을 공개하는 곳은 춘천시의회가 유일하다.

이설화

2023 08 02 ()

춘천MBC

11대 강원도의회 1년, 평가는?

◀ANC▶

11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대에 이어 11대에서
활동하는 도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새 인물들로 채워져
참신함과 새로움을 기대했는데요.

49명 도의원의 1년 간 의정 활동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 자치 법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조례.

1년 동안 강원도의회는
181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지사과 교육감이
제안한 조례를 빼면
의원들이 직접 만들고
대표 발의한 조례가 86건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엔
종합병원이 부족해 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송 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가결됐고,
현재는 구체적 시행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INT▶

[이지영/강원도의원]
"주민들은 그거를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그냥 감수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눈에 띕니다.

이 조례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 I N T ▶

[박호균/강원도의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1년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이밖에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와
학생 영양과 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등이
도민 생활 밀접 조례로 꼽힙니다.

[백승호 기자]

"지난 1년 동안 도의원들의 조례
대표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 정도입니다.
평균을 넘어 최소 2건 이상
발의한 도의원은 26명이었습니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변호사 출신 임미선 의원으로
1년 동안 모두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재웅과 이지영, 이기찬 의원도
최소 4건 이상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비해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20%인 10명에 달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려면
조례 발의뿐 아니라 도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예산안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의회 안팎에서는 11대 의원의
77%가 초선인 만큼 참신함과
새로움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I N T ▶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의원 사업비가 법에 근거도 없음에도
매년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갑질과
의원 개개인의 권위 의식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11대 도의원들의 남은 임기는 3년.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만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 E N D ▶
(영상취재/최정현)

#11대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1년평가

백승호
bsh@chmbc.co.kr

江原日報

2023 08 03 ()

11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준공

19억 투입 93면 조성
만성 주차난 해소 기대

【횡성】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2일 횡성읍 곡교리에서 김명기 군수,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이명령 원주공항장 등 공항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3년간 추진됐다. 총 19억 원이 투입돼 6,525㎡ 부지에 93대 규모의 주차장과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설치됐다. 그동안 곡교리 먹거리단지와 인접한 공항 주변지역에서는 제주행 국내 관광객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준공식이 2일 횡성읍 곡교리에서 열렸다.

의 차량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줄고 제주도 여행이 크게 늘어난 지난 2년여 동안 최악의 주차전쟁이 이어졌다. 특히 장기간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먹거리단지 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공항 이용객과 인근 상인들의 마찰이 일상화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최근 상황이 다소 나아지는 했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먹거리단지 주차공원 조성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향후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사업지 확보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임광식 군 투자유치과장은 “100대가량의 주차장 확충으로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항 주변 실익을 확대하고, 국내외 노선 증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학렬기자

江原日報

2023 08 02 ()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폭염대책,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열질환자수 781명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속보=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2일 강원자치도에 ‘재난안전정보포털앱 안전디딤돌 안내 부실’(본보 지난달 11일자 온라인 보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폭염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이 조사한 강원자치도 재난안전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년간 온열질환자수는 781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7월 말까지 온열질환자수는 53명으로 지난해 온열질환자수 54명에 육박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심각해지는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낮추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보에 보도된 ‘강원자치도 내 무더위쉼터 부실한 운영·관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증과 노령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언일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수가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재난취약계층과 취약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 10년간 온열질환 781명.10명 사망..."중장기 대응책 필요"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춘천3) 안전건설위원장은 최근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폭염은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식, 당장 올해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폭염피해를 낮추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집행부에 무더위쉼터의 부실한 운영을 점검하고, 구조 자격 없이 고령화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문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가 도에서 받은 최근 10년(2014년~2023년 7월)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781명이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최악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 가장 많은 203명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사망 사례 없이 53명이 발생해 54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지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실내외 무더위쉼터 총 1천527곳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8 02 ()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폭염 대비 안전대책 마련"

박기영(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폭염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폭염피해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40도' 무더위를 기록한 2018년 203명을 비롯해, 2019년 97명, 2020년 49명, 2021·2022년 각 54명 등이다. 2023년은 지난달 말까지 53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도 지난 2018년 4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등 발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군별 '무더위쉼터'는 편차가 크다. 원주시가 305곳으로 집계됐고, 태백시 14곳, 인제군 13곳, 철원군 23곳, 양구군 35곳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19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주문진 영화 찾아야

목요단상

정인수

제3·5대 강원도의원



2023년 7월 24일. 드디어 강원도 분청(分廳) 격인 제2청사 시대가 활짝 열려 기쁘다. 제2청사는 강릉 뿐 아니라 영동지역의 오매불망하던 숙원이었다. 제2청사 시대를 연 김진태 지사의 용단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청사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역대지사들은 좌우고면하면서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달랐다. 춘천 출신이면서도 민감한 영서지역 정서에 연연하지 않고 내린 강릉(주문진) 제2청사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도 난마의 결단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

거슬러 필자는 조선의원 시절 강원도의회에서 정책발언을 통해 분도 문제를 공론화했다. 1991년 12월 3일 제32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를 분할, 강원 동도를 만들자는 (영동 주민들) 외침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용단은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벌써 32년전의 선견지명이었다. 두개의 도(道)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인데, 명칭만 다를 뿐 지금의 제2청사와 같은 맥락이다.

2020년 8월 17일 자 강원도민일

보에는 ‘강원도 분청(分廳)은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청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지 않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이 개통되어 명실상부한 동해안·북방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2청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제에 김진태 지사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제2청사는 강원도립대 부속 건물에 더부살이하는 꼴이다. 제대로 된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 동가흥상이라 하여 분청 청사에 버금가야 한다. 예산 절감과 건립 시간 절약, 접근성을 들어 현재의 주문진 공설운동장과 인근 체육공원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건립하는 방안이다. 아니면 당초 강원도립대학 설립 당시 4년제 대학을 염두에 두고 확보했던 별도 부지 2만여평에 건립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강릉은 인구 급감과 낙후를 거듭하며 소멸지역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실현성 없는 말장난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럴 때 강원도 제2청사가 들어선 것은 천재일우다.

강릉 인구감소의 비중은 주문진에서 비롯한다. 강릉시의 인구감소 전략은 주문진을 살려 공동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옛 명주군 시절 수부였던 주문진은 버림받아 절망의 소읍이 된 지 오래다. 강릉에서조차도 서자처럼 취급하여 변방의 서러움을 받아가며 겨우 지탱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역민의 자

존심을 무시하는 매머드 지정폐기물처리장 건립공작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글픈 현실이다.

제2청사 개청을 계기로 주문진은 지난날 영화를 찾아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은 안된다. 발상의 전환과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평생 주문진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분골쇄신했다. 인문계 공립 주문진고등학교 설립에 이바지했다. 도의원 초선 시절 완성한 강원도립대학 설립은 22년에 걸쳐 이뤄낸 야심작이었다. 김병두 교육감의 절대적 지원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강원도교육공무원 연수원 설립을 성공시켰다. 역대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우려했던 숙원사업 주문진 해안도로(세칭 소원로)를 개설했다. 존폐 위기에 처한 사임당연수원을 교육감과 답판하여 살렸다. 크고 작은 성과는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치열하게 한세상을 살았던 노전사(老戰士)는 석양을 바라보며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한 처지가 됐다. 자연의 순리다.

생전, 주문진 제2청사 개청 경사를 접할 수 있어 마냥 행복하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주문진 사람들은 뜨거운 애환심과 결속력을 가지고 지킴이로서 분발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주문진으로 승화시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말라고 유언삼아 강조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22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국비 1억3500만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갖고 강원도에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도는 이번 수상으로 국비 1억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도는 2018년 특별상,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우수상, 2021~2022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년 대상에 이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호석

2023 08 02 ()

KBS 춘천

건물은 하난데 쉼터는 2개?...개수 늘리기 급급



[앵커]

'폭염도 재난이다' 무더위 쉼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제각각 쉼터로 지정하는가 하면, 건물 하나를 실내와 옥상으로 나눠 이중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노인이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밭 옆의 낡은 파라솔이 그나마 무더위를 피할 공간입니다.

정식으로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큰 길을 건너가야 나옵니다.

[최만호/춘천시 사농동 : "(저기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데 갔다가 쉬시다 오시지?) 이게 뭐 왔다갔다 시간 뺏기고, 가기가 싫으니까 안 가지."]

강원도의 무더위쉼터는 실내와 야외를 합해 1,529곳입니다.

지도가 빼곡하게 들어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 곳이 가득합니다.

특히, 강릉 왕산면 같은 농촌지역은 쉼터는 공공건물에만 있고, 정작 쉴 곳이 필요한 농경지 주변은 험하게 비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큼니다.

10제곱킬로미터 당 쉼터 수를 보면, 상위 3개는 전부 시 단위, 하위 3개는 전부 군 단위 지역입니다.

1위 속초시와 꼴찌 인제군의 차이는 무려 80배.

같은 면적이라면, 속초는 쉼터가 80개, 인제는 1개라는 애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 지정입니다.

춘천시 사북면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쉼터라는 간판 3개가 보입니다.

각각 보건소, 면사무소, 주민대피소입니다.

심지어, 건물은 하난데, 쉼터가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은 건물 자체가 실내쉼터인데,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옥상을 야외쉼터라고 또 지정해 놔습니다.

여기가 바로 실외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아무리 둘러봐도 쉼터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판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봐도 띄약별을 피할 그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겁니다.

읍면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쉼터를 지정하면서, 개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영/강원도의원 :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 편한, 용이한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고요."]

취재진이 만난 농민들은 하나같이 공공기관이나 마트는 씻고 가야 하는데, 발일을 하다가 그런 델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송승룡

2023 08 03 ()

07

江原日報

道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000명 지원

선정자·지자체 각 10만원 매칭
3년간 적립 만기 720만원 수령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00명에게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지원한다.

강원자치도는 올 5월 접수를 시작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과 관련, 도내 거주하면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10만원씩 매칭, 3년간 적립 기간을 거쳐 2025년에 만기 금액 720만원을 받게 된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추진했다.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 결혼자금과 창업자금 등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도내 청년 창업자들의 기술 창업 장려를 위해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사업도 전국 최초로 운영, 디딤돌 2배 적금과 함께 도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사업은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도내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대출과 이자를 지원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지사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06

강원TP, 반도체 산업육성 고도화 착수

프로그램 구축방향 등 확정

나노종합기술원과 협력 논의

강원테크노파크(원장허장현·이하 강원TP)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육성을 추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을 본격화한다.

강원TP는 반도체 교육센터의 입지 검토, 프로그램 구축방향 등을 확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수행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2027년까지 국비 200억을 비롯한 총 412억원을 투입해 공정실습 교육 중심의 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인력 공급과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원TP는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교육장비 구축(61종 210대), 프로그램 운영(연간 192회·3240명 교육), 산업연계형 인력양성(연간 1060명), 교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2026년

까지 총 44억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에 참여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TP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인프라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부품의 양산단계 실증테스트 시행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반도체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허장현 원장은 지난 1일 나노종합기술원(KAIST 부설기관)을 방문해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허장현 원장은 "앞으로도 반도체 교육센터가 반도체 인력양성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 역할을 강화해갈 계획"이라며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과 관련한 기업 유치 등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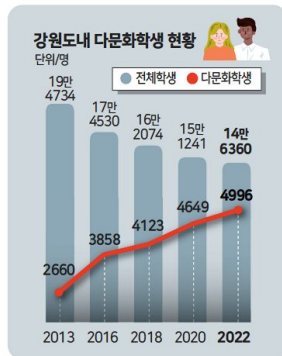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01

다문화 학생 수 10년간 2배...강원교육 '공존' 화두

지난해 초·중·고 4996명 집계
전체 학생 중 차지 비율 증가
이중언어교육·한국어 지도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제공



강원도내 다문화 학생이 매년 증가하면서 강원도내 일선 학교의 교실도 달라지고 있다. 도내 다문화 학생이 5000명대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이 강원교육의 과제로 떠올랐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한 초등학교는 36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부모 모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가정' 학생도 20명에 달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은 교사와 학생이 번역기를 통해 대화한다"고 밝혔다.

형성 A초교는 전교생 60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14명이 다문화 학생이고, B초교도 전교생의 20%가 다문화 학생이다. B초교 교장은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 상담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아버지들과 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학생은 4996명으로 집계, 전체 초·중·고 학생(14만 6360명)의 3.4%로 나타났다. 도내 다문화 학생의 수와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 2013년 1.4%(19만 4734명 중 2660명)에 불과하던 도내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하며 지난 2018년(4123명)에는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이후로도 계속 증가해 2021년에는 492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4996명으로 집계되며 5000명 초 과를 목전에 뒀다.

특히 해당 기간 베트남 출신 부모를

둔 학생 비율 급증이 눈에 띈다. 지난 2018년 학부모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는 30%(1235명)였으나 2020년에는 35.3%(1643명)를 기록하며 증가했다. 상승세는 계속돼 지난해는 39.2%(1960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학생 학부모 국적 현황은 베트남(39.2%), 중국(18.3%, 한국계 포함), 필리핀(15.4%), 캄보디아(7.2%) 순이었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발맞춰 현장과 교육당국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한국어 지도 지원, 다문화 언어 강사 제도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부모를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여러 국가 언어로 제작된 학부모용 입학 자료 등을 배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09

‘WT본부 이전 협약’ 태권도축제 전 가능할까

<세계태권도연맹>

시의회 이전 지속 동의안 미상정
육 시장 “발전 위해 적극 추진”
집행부 협의 나서 통과 관심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이 춘천시의회에 미상정된 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이 “큰 변화가 없다면 도시가 고일 수밖에 없다. 시장의 뜻과 진정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언급,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이전에 해당 동의안이 춘천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2일 8일간의 콜롬비

아국의출장을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 “도시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갖고 발전의 폭을 높이려면 시와 지역사회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동안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부족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더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와 함께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이 예정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춘천시는 축제 기간에 열리는 WT 집행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말 WT측과 협상은 마친 상태다. 그러나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안 통과가 필수다.

간담회에 앞서 육 시장은 실국별 업무 보고를 갖고 최근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기간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춘천시는 최근 폐회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의

원들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동의안은 미상정 처리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건물 조성비 190억원을 비롯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구조인 데다 협약 기간을 50년으로 설정한 게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육 시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의회와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3일 집행부측과 만나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안에 대해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열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송은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10

원주테크노밸리, 업체-정부 가교 역할 톡톡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 사업 등
잇단 정부공모 선정 기업 지원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준공 임박
인프라 확충 삶의 질 향상 기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가 의료기기 업체와 중앙부처를 이어주는 ‘정책 매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데이터 표준 개발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3층에 설치된 국내최고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부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공모사업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지역주관산업육성,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범부처협

력 표준개발 사업 등에 선정돼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범부처협력 표준개발은 원주의료기기산업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고도화지원, 디지털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분야와의 융합,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육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기산업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

고 있다. 센터가 준공되면 의료기기 업체의 부족한 공간 문제가 해소되고 원주 이전업체의 인프라 확충, 고령 사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재정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현대화 사업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안전사고 방지와 기업 이미지 상승에 안전사고를 예방과 기업 이미지 높여 입주기업의 호응도를 높였다.

한편 제19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는 9월 21~22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 1, 2층에서 열린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04

도내 모든 시·군 ‘폭염특보’ 비상 2단계 근무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기존 폭염 비상 2단계 근무의 확대 운영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비상 2단계 근무는 폭염경보가 11개 시·군에 발령되거나 8개 시·군의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운영된다. 지난달 31일부터 폭염 비상 2단계 근무가 적용됐다.

도는 지난 1일, 도내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지자 기존 폭염 비상 2단계 근무를 확대 조치했다. 이에 강원도 폭염 대응조직은 기존 6개 부서·6명에

서 11개 부서·18명으로 늘었다. 강원도 폭염 대응 조직은 각 시·군 및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응방안을 수립·운영한다.

2일 오후 5시 기준, 강원 지역 18개 지자체 중 15곳에 폭염경보가, 3곳에 폭염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강원 지역 온열환자는 1일 오후 5시 기준, 총 56명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도내 무더위 쉼터는 총 1527개소(실내 1332개소·야외 19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도는 읍·면·동사무소가 폭염 쉼터로 임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폭염은 예년과 달리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 만큼 비상 근무 부서와 인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 19

피서철 안전관리 끝까지 긴장해야

-물놀이사망강원 최다8월 가장 위험,노동현장 사고없도록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크고 작은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1일 동해시 전천항 인근에서 스노클링 하던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철원에서는 70대 농업인이 전복된 트랙터에 깔려 생명을 잃었고,영월에서는 세살 유아가 한 숙박지 수영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역시 숨을 거뒀습니다. 7월 말 춘천의 물놀이장에서 6세 어린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사고가 있었기에 반복발생이 우려됩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졸지에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는 안타까움이 더 큼니다. 7월 29일 원주와 횡성에서 노동자 2명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망하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원주에서는 벌목 작업 노동자가 나무에 깔렸다가 구조 이송했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횡성에서는 주택 축대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석축이 무너지면서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려와 5m 아래 매몰됐습니다. 50여 분만에 구출됐으나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유통점에서 카트 이동관리업무를 맡은 청년이 사망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철은 극한 날씨에 기상 이 불안정할 때이므로 복합적인 위해 요인이 상존합니다. 일터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수시 점검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작은빨간집모기 밀도가 높아지는데 대다수 감염자인 50대 이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실내생활 증가와 마스크 미착용, 면역력 감소 등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취약층 보호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지역은 최근 5년간 6~8월 물놀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여름철 발생한 136명 사망자 중 38명이 도내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25, 경남 15, 경기 14명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사망사고는 피서 절정기인 8월 발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응 체제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8 03 ()

/ 19

펄펄 끓는 폭염,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보호를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에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급증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으며, 4년 만에 폭염 위기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오후 3시31분 기온이 38.4도를 기록했다.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가 이어졌다.

온열질환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6호 태풍 '키누'이 동중국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에 주입함으로써 앞으로도 한동안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폭염을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홍수나 태풍처럼 건물 하나 파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많은 생명을 앗아 간다. 실제로 태풍이나 호우보다 폭염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2018년 온열질환으로 48명이 사망한 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다. 그해부터 4년간 질병청이 집계한 폭염 사망자는 146명에 달한다. 이 기간 호우·태풍·강풍·대설을

합친 자연재해 사망자(218명)에서 폭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올여름은 '역대급' 더위다. 2018년과 같은 '최악의 폭염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건설 현장의 폭염에 대비한 안전도를 제고하고, 쪽방촌을 비롯한 취약 주거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폭염 재난은 다른 재난들보다도 빈부의 차이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작성한 '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행안부, 4년 만에 폭염 '심각' 경보 발령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 확대해야

국회,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등 법안 심의를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유틸리티(Utility)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이 가정용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류호텔을 임대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폭염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 시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 확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여야는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3 ()

/ 19

북한강 특구, 강촌 제외 땀 실익 없다

-남이섬·자라섬 가평만 혜택... 춘천시 대안 검토해야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추진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광역단체 시군이 공동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흔치 않아 주목을 끌었지만, 문화관광부가 보안을 요구하는 등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평군이 강촌을 제외하고 남이섬과 자라섬 등 섬을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하자고 제안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촌이 대상 지역에서 빠진다면 춘천시가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춘천에 실익이 없다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와 가평군은 남이섬부터 강촌 구곡폭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강촌 경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남이섬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강촌과 도심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특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형적인 '문어발식 특구'라는 의견을 춘천시와 가평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춘천시에 강촌 제외를 제안해 협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특구 지정에 강촌이 제외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활성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 and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강원과 경기를 연결하는 북한강 관광벨트가 생겨 새로운 여행 코스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강촌이 제외된다면 가평만을 위한 특구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남이섬은 행정구역상 춘천에 속하지만, 선착장이 가평에 있어 사실상 가평상권으로 분류됩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가평군이 강촌 제외 의견을 계속 주장한다면 특구 추진은 불투명합니다. 당초 강촌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일인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양 시군 공동의 발전이 전제돼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춘천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구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춘천지역 단독 추진, 또는 도내 북한강 수변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8 03 ()

/ 19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도내 7곳은 안전한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에는 도내 7곳도 포함돼 있다. 5곳은 입주가 끝났고 2곳은 공사 중이다.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올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구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운 것이다.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날립공사 관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53%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런 후진국형 부실 공사가 만연했다는 점에 말문이 막힌다.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보강 조치 등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어서 전단 보강근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누락했다. 하중을 견디는 철근이 대거 누락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어느 한 단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근 빼먹기가 자행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업체까지 면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부실 시공은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책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실을 서로 눈감아 주는 이권 카르텔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른 아파트 안전과 품질에 대한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공동 주거시설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지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32명의 목숨을 앗아 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 현장엔 여전하다. 이번 기회에 비리·부정을 뿌리 뽑고 신뢰할 만한 안전 확보 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부실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들을 안심시킬 완벽한 보강 방안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